

해외노동연구기관 소개

프랑스

고용연구소 CEE

독일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 IAB

노동·기술연구소 IAT

■ 프랑스

프랑스의 고용정책 연구는 중앙집권화된 형식으로 주로 공공기관들이 담당한다. 각종 연구의 주축으로 대학교들과 그랑제꼴이 활동하고 있으며, 기초연구기관들로는 프랑스 최대 기초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에서도 고용과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프랑스 경제통계국(INSEE)에서는 고용과 경제활동인구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며, 프랑스 인구통계학연구소(INED)에서도 경제활동인구와 노동자 이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부 산하에 고용연구소(CEE)가 만들어졌고, 대학부설 연구기관들도 여럿 생겨났다.

지금은 이런 다양한 연구기관들 사이에 연계가 강화되어 처음에 노동부 산하 연구원으로 만들어진 CEE도 국립과학원(CNRS)과 다른 대학 연구팀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들과 제휴하여 재정적으로는 독립적으로 고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고용정책 연구는 평가에 관련된 것(평가관행에 대한 고찰, 국가 또는 유럽 차원에서의 고용정책 평가 등)과, 사회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취약계층, 복지, 인구구조변화와 고령화 등), 그리고 근로시간에 관한 이슈들 위주로 진행된다.

고용연구소 CEE

(Centre d'Etudes de l'Emploi)

CEE는 프랑스 노동부 산하의 공공 연구기관으로, 1971년 설립되었다. 연구소의 학

<편집자주>

이 란에서는 2004년 6월 23~2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노사관계학회(IIRA) 제5차 아시아 지역대회의 특별세션인 세계노동포럼에 참가하는 세계 노동연구기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마지막 순서로 프랑스와 독일에 있는 세 곳의 연구기관을 소개한다.

술이사회는 7인의 대학교수(프랑스 또는 외국), 5인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대표, 3인의 연구원 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기본적으로 4년 단위로 구성되는 학술연구 프로그램 선정에 참여하고 있다. 행정위원회는 노동부와 학술연구부의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6명의 위원과 3명의 연구자 및 2명의 연구소 인사담당자로 구성되어 연구소의 조직과 예산집행 등을 심의한다.

직원은 40여 명의 사회학자, 경제학자, 통계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들과 30여 명의 행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학과 사회학 박사과정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CEE 예산의 90%는 학술연구부에서 지급되는 기금이며, 나머지 10%는 프랑스나 유럽연합 행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입찰로 충당한다.

앞서 언급한 4년 단위 학술연구 프로그램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학술이사회에 상정되어 결정한다. 세 가지 주요 연구부문은 1) 고용과 고용의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2) 노동자, 조직화된 노동, 3) 기업과 노동시장: 제도주의적·다원주의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고용정책 관련 연구는 프랑스 국가 차원과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고용정책과 고용관행 평가, 유럽연합 고용정책과의 상호작용, 공공 고용정책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근로시간과 유연성, 취약계층 등을 주제로 한 것이 많다. 또 최근에는 사회복지와 고용정책과의 상호작용, 직업태도 및 행동과 가족 조성을 다루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동과 유럽연합의 고용관련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http://www.cee-recherche.fr> 이다. 연구보고서들과 발간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 독일

독일은 연방국가로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고용정책의 이행과 개발을 담당하며,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를 의뢰하는 것도 주정부가 맡고 있다.

다양한 고용 관련 연구소들이 있는데, 연방차원의 연구소로는 연방고용청(BA) 산하 연구소인 IAB와 연방정부 산하 WZB, 독일노총(DGB) 산하 연구소로 WSI가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IAT와 바덴 뷔템베르크 주의 ZEW가 있다.

대학 연구소들도 학술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조직화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개별 연구자 또는 연구 프로젝트별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 IAB: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는 독일연방고용청(BA) 산하 연구소로 고용청의 공공고용안정서비스 제공에 학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되었다. 연구소의 학술이사회는 1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경영자 대표로 경제연구소 DIW와 노동자 대표로는 노총 산하 연구소 WSI에서 각각 1인이 이사회에 참석한다. 연구소 원장은 연방고용청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총 직원은 150여 명으로 이 중 75명이 경제학, 사회과학 및 수학, 경영학 전공 연구자들이다.

IAB 예산은 연방고용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IAB는 거의 전적으로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연구용역이 나머지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5년 단위의 학술프로그램은 IAB내에서 논의하여 연방고용청과 IAB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같이 참가하는 삼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6개 주요 연구부문은 1)노동시장 장기전망과 국제 분석, 2)단기노동시장 전망 및 근로시간, 3)노동시장 사회학적 측면, 4)직업 및 자격, 5)기업의 노동수요와 혁신, 6)통계학적 방법론 및 지역노동시장이다.

IAB가 연방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하는 등 연방 차원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홈페이지는 <http://www.iab.de> 이다.

노동·기술연구소 IAT: (Institut Arbeit und Technik)

IAT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1988년 설립한 연구소로 구조적이며, 기술적인 변화가 노동과 고용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IAT의 학술이사회는 총 17명으로 주정부 및 노조에서 선정한 관련 전문가와 해당 지역 대학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IAT의 원장은 주정부에서 임명한다. 그리고 4개의 연구 부서별(노동시장, 서비스 제도, 산업별 발전, 생산제도)로 국장이 번갈아 가면서 연구소 부원장을 맡고 있다.

총 직원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포함해서 100명이 넘고, 이 중 54명이 사회학, 사회경제학, 정치과학 분야를 전공한 연구자들이다.

IAT 예산의 50%가 주정부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50%는 주정부, 연방정부 및 유럽연합의 여러 기관들로부터의 위탁연구계약으로 충당된다.

학술 프로그램은 5년 단위의 장기 프로그램과 1년 단위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각 연구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을 학술이사회와 주정부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연구 주제는 새로운 작업조직 형태와 혁신제도, 새로운 노동시간, 기업 단위의 유연화정책, 기업 또는 산업별 새로운 정보시스템 등 기술혁신이 주요한 이슈다. 세계화 및 지역화 관련 연구나 기술개발 관련 연구에서도 혁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IAT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고용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며, 연구소의 연구 성과는 연방학술회의(Wissenschaftsrat)에서 평가받는다.

홈페이지는 <http://iat-info.iatge.de/>이다. 뉴스레터를 받아 볼 수 있고, 주제별로 정리된 연구보고서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